

영빈관 신축 포기...외빈 접견 박물관·고궁 등 이용 검토

대통령실, 청와대 사용 검토 안해

대통령실 청사 외벽 리모델링

용산 경내 관저 신축 무기한 보류

대통령실이 영빈관 신축을 사실상 포기하기로 했다. 대규모 외빈 방문으로 청사 내 공간이 부족한 경우 인근의 국립중앙박물관 등 외부 시설을 이용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4일 "영빈관 신축은 사실상 무산"이라며 "용산 청사 내 시설을 대신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용산 청사 2층의 대통령 집무실 옆에는 누리홀과 다목적홀 등이 마련돼 있다.

애초 유사시 '간이 영빈관'으로 사용하기 위해 설계된 공간들로, 안에 테이블을 빈틈 없이 배치하면 최대 100명이 넘는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으로 부족할 때는 청사 밖 시설을 대관할 수밖에 없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지난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 환영 만찬을 열었던 국립중앙박물관 등이 유력한 장소다.

용산 청사에서 정상회담을 마치고 차장으로 이동하면 불과 2~3분 만에 닿을 수 있는 거리다.

일각에서는 경복궁 경회루 등 서울 시내 고궁을 외빈 접대 장소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

오지만, 국민 정서상 어렵다는 지적도 잇달았다.

기존 청와대 영빈관 사용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와 함께 이미 일반 시민들에 개방된 공간이라는 점에서.

평시 일반인들의 예약장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국방컨벤션센터도 고려 대상이 아니다.

대통령실은 취임식 당일 외빈 초청 만찬을 열었던 신라호텔, 이튿날 재외동포 초청 리셉션을 열었던 롯데호텔 등 시내 고급 호텔 역시 부적절하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호텔은 가급적 (이용)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내부 의견"이라며 "당분간은 박물관 등을 활용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인수위 시절부터 물밑 검토해 온 용산 청사 외벽 리모델링이나 용산 경내 관저 신축 등의 사업도 무기한 보류한 상태로 알려졌다.

적어도 내후년 총선 전까지는 원내 여소야대 상황에서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앞서 2024년까지 용산 경내에 새 영빈관을 짓기로 하고, 총 878억6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영빈관 신축 예산이 논란이 되자 "즉시 예산안을 거둬들이며 국민께 심려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며 전면 철회를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 전용기 구매가 이번이 무산된 것처럼 새 인프라 마련이 쉽지 않다"며 "국민 공감대와 여야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외통위 국감 30분만에 정회 4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박진 외교부 장관의 퇴장 문제를 놓고 여야 간 대립으로 파행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박지원 전 국정원장 민주 복당 초읽기

차기총선 맞물려 지역 정치권 촉각

민형배 의원 현재 판결 고려 보류

박지원(사진) 전 국가정보원장이 조만간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박 전 원장의 민주당 복당이 현실화된다면 여야의 대결 구도가 펼쳐지고 있는 중앙 정치권은 물론 차기 총선 출마 등과 맞물려 지역 정치권에도 상당한 변화를 몰고 오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민주당 주요 관계자가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복당을 제안했다. 이 관계자는 "박지원 전 원장과 김수완 박 법안 처리를 위한 탈당한 민형배 의원의 복당을 동시에 추진하려 했지만 헌법재판소 판결 등을 고려, 박 전 원장의 복당을 먼저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전 원장 측은 국정감사 이후 적절한 시기에 복당에 나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박 전 원장 측 관계자는 "민주당 고위 관계자로부터 복당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늦어도 올해 내에는 민주당에 복당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이 박 전 원장의 민주당 복당에 걸림돌이 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검찰 수사에 충분히 대비하고 있고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의 민주당 복당은 정치권의 이슈로도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의 원로 정치인인 박 전 원장이 민주당에 다시 합류한다면 여권과 전면전을 치르고 있는 제1야당의 전력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박 전 원장의 복당을 두고 지역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 전 원장의 현실 정치 복귀는 차기 총선 구도와 맞물리면서 지역 정치권의 지각 변동을 몰고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박 전 원장 측 관계자는 "아직 복당도 하지 않았는데 차기 총선을 거론하는 것은 너무 나간 것"이라며 "박 전 원장은 주어진 현실과 맞겨진 책무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민주세력 대통합의 명분 아래 민주당을 탈당했었던 인사들이 대부분 복당했지만 박 전 원장은 당시 국정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어서 복당하지 못했다. 대선 이후에는 민주당이 비상대책위 체제로 운영되고, 이후 지방선거와 정당대회가 잇달아 치러지면서 박 전 원장의 복당이 미뤄져 왔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윤 대통령 감사원 文 감사 논란에 "언급 부적절"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를 통보하고 문 전 대통령 측이 반발하는 데 대해 "대통령이 뭐라고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청에 문 전 대통령이 불쾌감을 표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물음에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고 대통령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기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부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진상 규명을 강조해 왔는데 진상 규명 과정에서 그 누구도 예외나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일반적인 원칙 아니겠느냐"고 답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해당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선 '성역 없는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문 전 대통령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도 사실상 여당의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北, 광 타격권 IRBM 최대사거리 4500km 발사

美 증원전력 겨냥 등 노림수

5년만에 일본열도 통과

북한이 4일 5년 만에 일본 상공을 넘긴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해 그 의도와 배경이 주목된다. 이날 발사한 IRBM은 고도 970km로 4500여 km를 비행, '화성-12형'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IRBM의 비행거리로 볼 때 최대 사거리로 발사해 결과적으로 주일미군 기지를 포함해 미국령 태평양 광까지 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평양에서 미국령 광까지의 거리는 3400여km이다.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이 발진하는 지점 뿐 아니라 한반도 인근으로 접근하는 미군 전력을 겨냥한 전략

도발로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올해 1월에 발사했던 IRBM과 달리 이번엔 구현 가능한 사거리로 실제 발사하면서 태평양의 미국 전력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이번 미사일은 2017년과 올해 초 발사한 IRBM 화성-12형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7년 9월 15일 이후 5년 만에 일본 열도를 넘어가게끔 미사일을 쏜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북한은 일본의 반발을 무시하면서 광뿐 아니라 일본에 배치된 미군 전력에 대해서도 위협을 가한 셈이다.

IRBM은 미국의 분류 기준상 사거리 3000~5500km의 탄도미사일이다. 중거리탄도미사일(MRBM)보다 사거리가 길고, 5500km 이상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보다는 짧다. /연합뉴스

한국콘텐츠진흥원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세상 모든 K-콘텐츠가 빛날 수 있도록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체계적이고 혁신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탄탄한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K-콘텐츠가 빛날 때까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함께하겠습니다

끊임없는 혁신으로 콘텐츠산업의 도약을 이끕니다

www.kocca.kr